

제 1 교시

국어 영역(사회·문화 분야)

[수특 113~116쪽 연계] 채권 만기 수익률의 결정 요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소통 환경을 구현하였고,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을 제공하며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은 정보의 신뢰성 저하나 무분별한 비방과 같은 역기능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중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현실의 신원 대신 아이디(ID)나 닉네임과 같은 가상의 식별 부호를 사용하며, 이러한 인터넷 ID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 현실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람'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특정인을 지칭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용이하게 충족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ID만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 과연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현실 세계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 문제는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과거 법원은 인터넷 ID나 닉네임만으로는 그것이 지칭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해당 ID 사용자와 그 주변 인물들만이 ID의 주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그 ID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와 함께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ID 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ID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 내역, 게시물 내용, 커뮤니티 내에서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가령 특정 ID 사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했거나, 그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상 ID와 현실 인물이 비교적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법원은 표현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ID가 현실의 특정인을 지칭함을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 문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소수

의견 개진과 권력 비판 기능을 수행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명예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만연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건전한 소통 문화 저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인터넷 ID를 둘러싼 명예훼손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정비와 더불어 기술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가 온라인 표현 행위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분별력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노력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 ② 과거 법원은 인터넷 ID만으로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③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성 요건이 비교적 용이하게 충족되는 경향이 있다.
- ④ 최근 법원은 ID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특정성을 판단한다.
- 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없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정보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 ② 과거에는 인터넷 ID 사용자의 주변인들만 그를 인지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성이 부정되었겠군.
- ③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만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겠군.
- ④ 사이버 명예훼손 규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겠군.
-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 외에도 이용자들의 책임 의식 함양과 같은 사회문화적 노력이 중요하겠군.

3. 윗글의 필자가 <보기>의 주장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익명 표현의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익명성을 없애야만 무책임한 발언이 줄어들 것입니다.

- ①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익명 표현의 제한은 소수 의견 개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③ 강력한 처벌과 익명성 제한은 온라인 소통 문화를 즉각적으로 개선할 최선의 방안입니다.
- ④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수특 117~120쪽 연계] 다양한 연금 제도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동은 전통적인 가족 부양 시스템의 약화와 맞물려, 개인이 노동 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연금 제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핵심적인 사회 보장 장치로 기능하며, 그 설계와 운영 방식은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여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 그 가입과 운영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써, 사회 구성원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노년층의 빈곤 문제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거의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수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은 크게 현재 근로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현재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과, 장래의 연금 지급 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적립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평균 수명의 증가는 부과방식을 채택한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적립방식 역시 기금 운용 수익률의 변동성이나 인플레이션 위험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이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되는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으로, 기업이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운용 성과가 부진할 경우 기업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동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지만, 동시에 투자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잦은 직장 이동 시에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가적인 개인 부담금 납입을 통해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공적 및 사적 연금 제도가 병존하며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각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이나 보장 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이 낮아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노후 빈곤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각 연금 제도가 제공하는 수익률의 차이나 세제 혜택의 불균형 등은 연금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포괄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사회 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정교하게 모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적연금은 사회 구성원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다.
-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운용 성과가 부진하면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추가적인 개인 부담금 납입을 통해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 있다.
- ⑤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5. 밑글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의 과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적연금의 적립방식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므로, 가입자 개인의 투자 책임이 강조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모든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겠군.
-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연금 자산 형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겠군.
- ④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잘 구축될수록, 각 연금 제도의 수익률 차이나 세제 혜택의 불균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겠군.
- ⑤ 연금 제도의 포괄성을 높여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겠군.

6. 위글의 필자가 제시한 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적연금의 부과방식은 재정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투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을 지적한다.
- ③ 연금 제도의 포괄성 제고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연금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연금 제도의 병존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맞춤형 지원 방안'은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필자가 강조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급여 적정성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구체적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수특 121~125쪽 연계]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 기법과 외부적 기법

글로벌 경제의 심화는 국가 간 교역 및 자본 이동을 촉진하였으나, 동시에 각국 통화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증대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보유 중인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 즉 환위험에 노출된다. 환위험은 특히 수출입 거래가 빈번하거나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경영 변수로 작용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장기적인 성장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환위험 관리 기법은 기업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부적 기법과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외부적 기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내부적 기법은 기업 스스로 통제 가능한 수단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매칭(matching)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통화로 표시된 미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시기와 금액 면에서 일치시켜 상계함으로써 환노출의 순 규모를 줄이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로 수출 대금을 수취할 예정인 기업이 동시에 미국 달러로 원자재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두 거래의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달러화 현금 흐름을 일치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매칭은 동일 기업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외화 수입과 지출을 연결하는 자연적 매칭과,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반대 포지션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병행적 매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매칭 기법은 별도의 금융 비용 없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외화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일치시키기 어렵고 거래 시점이나 규모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제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리딩(leading)과 래깅(lagging) 기법은 기업의 환율 예측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리딩은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또는 결제 통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될 때, 외화 부채의 상황을 앞당기거나 외화 자산의 회수를 서둘러 불리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다. 반대로 래깅은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 또는 결제 통화 가치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외화 부채의 상황을 늦추거나 외화 자산의 회수를 지연시켜 유리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성공할 경우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예측이 빗나가면 오히려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따르며,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및 관계 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리딩과 래깅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자금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네팅(netting)은 본지사 간 또는 계열사 간 다수의 상호 채권·채무를 특정 시점에서 통합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양자 간 네팅은 두 기업 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이고, 다자간 네팅은 여러 기업 간의 채권·채무를 특정 네팅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전체적인 외환 거래 규모와 관련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송금 수수료 절감, 환전 비용 감소, 자금 운용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출입 계약 시 결제 통화를 자국 통화로 지정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거래 상대방과 분담하는 통화 선택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가격 정책 조정 역시 내부적 환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들은 기업의 특성과 거래 상황, 환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다.

7.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매칭은 별도의 금융 비용 없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네팅은 다수의 상호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 ③ 리딩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외화 부채 상황을 앞당기는 전략이다.
- ④ 병행적 매칭은 동일 기업 내 자연 발생적 외화 수입과 지출을 연결하는 것이다.
- ⑤ 가격 정책 조정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위험을 외부로 이전하는 기법이다.

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칭 기법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없이도 기업 내부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군.
- ② 다국적 기업이 네팅센터를 활용하면 개별 거래마다 송금하는 것보다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군.
- ③ 리딩과 래깅은 환율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
- ④ 수출 계약 시 결제 통화를 자국 통화로 지정하는 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수입하는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하는 효과가 있겠군.
- ⑤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거래 상대방과 분담하는 통화 선택 조항을 활용하면, 기업은 환율 예측 능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군.

9. 윗글을 읽고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 내린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네팅은 다국적 기업에게만 유용한 기법이다.
- ② 매칭은 거래 시점이나 규모가 불일치해도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 ③ 리딩과 래깅은 환율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은 외부적 기법과 달리 기업의 환율 예측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⑤ 내부적 기법들은 각자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므로 기업은 상황에 맞춰 이를 선택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특 135~138쪽 연계]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현대 사회에서 개인 간 혹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확대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경제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각의 방법은 고유한 관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소득 분배 상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로렌츠 곡선과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니 계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로렌츠 곡선은 인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로축에 인구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 해당 인구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그린 곡선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 균등 상태에서는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직선의 형태를 띤다. 실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이 이 완전 균등선에서 아래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니 계수는 이러한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과 가로축, 세로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지니 계수 값이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함을,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극심함을 의미하여 국제적인 비교나 시계열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지니 계수는 전체적인 불평등 수준을 단일 수치로 요약하여 보여주므로, 동일한 지니 계수 값을 갖더라도 소득 분배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특정 계층의 소득 변화 양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정 소득 분위 간의 비율을 살펴보는 방법도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5등분하여 최상위 20% 계층(5분위)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계층(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산이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 배율 방식은 주로 양극단 계층의 소득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 분포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주로 최상위층의 소득 집중과 최하위층의 소득 정체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Palma ratio)이 주목받고 있다. 팔마 비율은 중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경험적 관찰에 기반하여, 소득 불평등의 핵심을 양극단의 격차로 보고 이

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지표로 평가받는다. 한편,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라는 규범적 관점을 소득 불평등 측정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존재하는데, 앳킨슨 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라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서 얻어지는 사회 후생 수준과,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소득(평균 소득)을 가질 경우 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 후생 수준을 비교한다. 이 지수는 연구자가 ‘불평등 혐오 계수(inequality aversion parameter)’라고 불리는 특정 값을 설정하도록 하는데, 이 계수는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기피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불평등 혐오 계수가 클수록 소득 분배의 균등성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 분포에 대해서도 앳킨슨 지수 값은 더 높게, 즉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 혐오 계수의 설정이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수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따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들은 각각의 장점과 함께 특정 측면을 부각하거나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소득 불평등의 다면적인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분석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10.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5분위 배율은 계산이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 ② 팔마 비율은 양극단의 격차로 소득 불평등의 핵심을 측정한다.
- ③ 지니 계수는 동일한 값이라도 소득 분배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를 수 있다.
- ④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혐오 계수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로렌츠 곡선은 완전균등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5분위 배율이 동일한 두 사회는 중산층의 소득 분포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팔마 비율이 낮아졌다면, 이는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반드시 증가했음을 의미하겠군.
- ③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에서 멀어질수록,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혐오 계수 값과 관계없이 항상 낮아지겠군.
- ④ 소득 불평등의 다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표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군.
- ⑤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앳킨슨 지수를 통해 파악되는 현재의 사회 후생 수준과 잠재적인 사회 후생 수준 간의 격차는 크지 않겠군.

12. 윗글을 읽고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니 계수는 국제 비교에 유용하겠군.
- ② 5분위 배율은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군.
- ③ 팔마 비율은 양 극단의 격차에 주목하는 지표이군.
- ④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혐오 계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소득 불평등의 다면적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높은 지니 계수만을 핵심 지표로 삼고 다른 지표들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수특 139~141쪽 연계] 관세의 기능과 관세의 종류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관세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한다.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각국의 경제 주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능과 종류에 대한 이해는 현대 경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세는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다. 특정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아직 취약하거나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일 경우, 정부는 해당 산업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보호 기능은 특히 유치산업이나 사양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과거 많은 국가에서 관세가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국가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능 외에도 관세는 국제수지 개선, 특정 상품의 소비 억제, 그리고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려 시도할 수 있다. 더불어 사치품이나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국내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세는 국제 관계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폐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조절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그 부과 목적, 과세 표준, 세율 적용 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종류는 고유한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과세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물가 변동에 따라 세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 가격 신고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량세는 과세가 간편하지만 물가 상승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제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상계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긴급관세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 관세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관세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한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로서 기능한다.

13.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는 국내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관세는 국가의 경제 주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③ 종가세는 물가 상승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④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는 과세 목적을 기준으로 한 관세의 종류이다.
 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14. 밑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모두 국내 산업 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질 수 있겠군.
 ②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군.
 ③ 국가 재정에서 관세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군.
 ④ 종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수가 증가하지만, 수입 가격 신고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량세와 차이를 보이겠군.
 ⑤ 국제 사회에서 경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겠군.

15. 윗글을 읽고 '관세의 국내 산업 보호 기능'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호관세는 재정 수입 확보와 무관하다.
- ② 관세는 국내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관세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 ④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국제 사회에서 항상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는다.
- ⑤ 유치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해당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연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16.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기는
- ② 거두는
- ③ 올리는
- ④ 더하는
- ⑤ 정하는

[수특 303~306쪽 연계] 행동 경제학의 두 체계 이론의 주요 내용과 부존자원 효과의 개념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주어진 정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해 왔다. 그러나 현실 속 인간은 종종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거나 감정적 요인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인간 행동의 심리적 측면을 경제 분석에 접목한 분야가 바로 행동 경제학이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심리적 편향이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론이 중요한 논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행동 경제학 분야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두 체계 이론’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인간의 정신 안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사고 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체계인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며 빠르게 작동하는 자동적 사고 과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즉각적인 판단이나 반응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타난 위험을 감지하거나 간단한 산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시스템 1이 처리한다. 반면, 두 번째 체계인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느리게 작동하는 숙고적 사고 과정이다.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처럼 신중한 검토와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2가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1이 신속하게 내린 판단을 시스템 2가 감독하고 통제하지만, 시스템 2는 작동에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게으른 특성을 보여 시스템 1의 판단이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이중적 사고 체계는 다양한 경제 현상 속에서 관찰되는 비합리적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부존자원 효과(endowment effect)’를 들 수 있다. 부존자원 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특정 재화의 가치가 시장 가격과 같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지만, 부존자원 효과는 소유라는 주관적 경험이 가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등이 진행한 고전적인 머그컵 실험은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후, 머그컵을 받은 집단에게는 얼마에 팔 의향이 있는지, 받지 않은 집단에게는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머그컵을 소유한 집단이 제시한 평균 판매 희망 가격보다 머그컵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이 제시한 평균 구매 희망 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부존자원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심리적 기제로는 자신이 소

유한 대상에 대한 애착 형성과 함께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이 지목된다. 손실 회피란 사람들이 동일한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약 두 배 이상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는 시스템 1의 감정적 반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단 어떤 대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손실’로 인식되며, 이 손실감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소유물의 가치를 실제 시장 가치보다 부풀려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부존자원 효과는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고수하거나, 이미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쉽게 매도하지 못하는 현상 등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는 때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거나 시장 거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항상 합리성에 기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스템 2는 시스템 1보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
- ②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해 왔다.
- ③ 두 체계 이론은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 ④ 부존자원 효과는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이다.
- 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18.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경제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 ② 시스템 2는 인지적 자원 소모가 적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주로 활성화된다.
- ③ 부존자원 효과는 소유물의 객관적 가치보다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이다.
- ④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모든 경제적 선택이 시스템 1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 ⑤ 머그컵 실험에서 머그컵을 소유한 집단은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 판매 희망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것이다.

19. 윗글을 읽고 ‘부존자원 효과’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존자원 효과는 시스템 1의 작용과 관련이 깊겠군.
- ② 부존자원 효과는 소유 경험이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군.
- ③ 부존자원 효과는 시장 거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어.

- ④ 부존자원 효과는 전통 경제학이 간과한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군.
- ⑤ 부존자원 효과는 객관적 가치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합리적 자원 배분을 촉진하겠군.

해설

1. 정답 : ⑤
해설 : ⑤ 5문단에서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없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지 내용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1문단, ② 2문단, ③, ④ 3문단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정답 : ③
해설 : ③ 5문단에서 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규제의 정비와 더불어 기술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는 이러한 다각적 접근의 한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①은 1문단, ②는 3문단, ④는 4문단, ⑤는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
3. 정답 : ③
해설 : ③ 필자는 마지막 문단에서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술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보기>의 주장처럼 처벌 강화와 익명성 제한을 “최선의 방안”으로 단정하고 긍정하는 것은 필자의 입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머지 선지들은 필자가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견해에 해당한다.
4. 정답 : ②
해설 : ② 2문단에 따르면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의 변동성이나 인플레이션 위험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2문단에서 공적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③ 3문단에서 확정급여형은 운용 성과 부진 시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3문단에서 IRP는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 혜택과 노후 대비 강화를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⑤ 1문단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킨다고 서술한다.
5. 정답 : ⑤
해설 : ⑤ 4문단은 연금 제도의 포괄성 제고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노후 빈곤 문제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문단에서 연금 제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이 사회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추론은 타당하다. ① 공적연금 적립방식에서 가입자 개인의 투자 책임은 강조되지 않는다. ② 확정급여형도 기업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 ③ IRP가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근거는 지문에 없다. ④ 다층적 체계 구축만으로 불균형 문제가 자연 해소되지는 않으며,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문은 강조한다.

6. 정답 : ⑤
해설 : ⑤ 필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요구한다. 이 두 목표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구체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비판으로 적절하다. ① 필자는 부과방식의 ‘심각한 우려’를 언급했을 뿐,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② 필자는 확정급여형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③ 필자는 포괄성 제고와 함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괄성 제고 자체가 불평등 해결에 미흡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필자의 의도와 거리가 있다. ④ 필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아직 모색 단계의 방안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일 수 있다.

7. 정답 : ①
해설 : 정답인 ①은 2문단에서 매칭 기법은 별도의 금융 비용 없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적절하다. ② 네팅은 4문단에서 다수의 상호 채권·채무를 특정 시점에서 통합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므로, 개별적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리딩은 3문단에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또는 결제 통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될 때 외화 부채의 상환을 앞당기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므로, 자국 통화 가치 상승 예상 시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병행적 매칭은 2문단에서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반대 포지션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자연 발생적 외화 수입과 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적 매칭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격 정책 조정은 4문단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언급되며,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1문단에서 외부적 기법으로 설명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 ⑤
해설 : ⑤ 4문단에서 언급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거래 상대방과 분담하는 통화 선택 조항’은 위험을 양측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특정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화 선택 과정에서 환율 예측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2문단에서 매칭은 기업 내부 자원 활

용 및 별도 금융 비용 불필요를 언급하여 추론 가능하다. ② 4문단에서 네팅센터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자금 운용 효율성 증대를 설명한다. ③ 3문단에서 리딩과 래깅의 환율 예측 의존성과 자금 흐름 영향을 명시한다. ④ 4문단의 자국 통화 지정은 수출 기업의 환위험 회피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정답 : ⑤

해설 : ⑤ 넷째 문단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들은 기업의 특성과 거래 상황, 환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① 넷째 문단에서 네팅은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에서 유용하다고 했으며, 양자 간 네팅도 언급되므로 다국적 기업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② 둘째 문단에서 매칭은 거래 시점이나 규모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된다. ③ 셋째 문단에서 리딩과 래깅은 환율 예측이 빗나가면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셋째 문단에서 리딩과 래깅은 기업의 환율 예측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 정답 : ⑤

해설 : ⑤ 2문단에 따르면, 로렌츠 곡선은 완전균등선에서 아래로 떨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완전균등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3문단에서 5분위 배율은 계산이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언급한다. ② 3문단에서 팔마 비율은 양 극단의 격차로 소득 불평등의 핵심을 측정한다고 설명한다. ③ 2문단에서 지니 계수는 동일한 값이라도 소득 분배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④ 4문단에서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 혐오 계수를 통해 사회적 가치판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1. 정답 : ⑤

해설 : ⑤ 지니 계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소득 분배가 매우 균등함을 의미한다. 4문단에서 앳킨슨 지수는 현재의 사회 후생 수준과 모든 구성원이 평균 소득을 가질 경우 달성될 수 있는 잠재적 사회 후생 수준을 비교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득이 균등할수록 두 수준 간의 격차는 작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5분위 배율은 양 극단 계층 비교에 초점을 맞추므로 중산층 소득 분포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으므로, 중산층 분포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3문단에 따르면 팔마 비율은 상위 10%와 하위 40% 계층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③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에서 멀어지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므로, 앳킨슨 지수 값은 불평등 혐오 계수가 양수일 경우 더 높아진다.

④ 4문단에서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언급하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여러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주관 개입 여지가 없는 지표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2. 정답 : ⑤

해설 : ⑤ 지문은 마지막 문단에서 '소득 불평등의 다면적인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분석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니 계수만을 핵심 지표로 삼고 다른 지표들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지표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강조하는 지문의 관점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반응이다. ①, ②, ③, ④는 지문에 제시된 각 지표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한 반응이다.

13. 정답 : ③

해설 : ③ 4문단에서 "종량세는 과세가 간편하지만 물가 상승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문에서는 증가세의 장점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세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 시 실질적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증가세가 아닌 종량세의 단점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다.

14. 정답 : ⑤

해설 : ① 5문단에서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므로 추론 가능하다. ② 2문단에서 관세는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내 산업을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추론 가능하다. ③ 2문단에서 관세가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증가세는 가격 기준 과세로 가격 상승 시 세수 증가 및 신고 정확성 문제가 있고, 종량세는 수량 기준 과세이므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답) 1, 3, 5문단에 따르면 관세는 경제 주권 행사이며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교역 상대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문과 배치된다.

15. 정답 : ⑤

해설 : ⑤ 지문은 관세가 유치산업을 보호하여 성장할 시간을 확보한다고 언급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산업이 외부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자생력 확보가 지연되고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① 지문에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의 목적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보호관세가 재정 수입 확보와 무관하다고 단

정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② 지문은 관세의 기능 중 하나로 국내 고용 안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산업 보호 기능'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설명일 뿐, 그 기능의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반응으로 볼 수 없다. ③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여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지문은 특수 관세 등이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지만 때로는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므로, 관세 보호가 국제 사회에서 항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정답 : ①

해설 : (가)의 '부과하는'은 '세금이나 책임, 의무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① '매기는'이다. ② '거두는'은 이미 부과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③ '올리는'은 세율이나 가격 등을 인상하는 의미에, ④ '더하는'은 기존의 것에 추가하는 의미에, ⑤ '정하는'은 세율이나 세목 등을 결정하는 의미에 가까워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7. 정답 : ①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르게 작동하는 자동적 사고 과정이며,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느리게 작동하는 숙고적 사고 과정이다. 따라서 시스템 2가 시스템 1보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② 1문단에서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해 왔다고 언급한다. ③ 2문단에서 두 체계 이론은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3문단에서 부존자원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⑤ 1문단에서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심리적 편향이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 정답 : ⑤

해설 : ⑤ 정답. 3문단의 머그컵 실험 결과와 4문단의 손실 회피 성향을 연결하면, 소유 집단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로 판매 희망가를 높게 책정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시스템 1의 감정적 반응과 관련된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며, 심리적 편향은 행동 경제학의 주요 대상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시스템 2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며 느리게 작동한다. ③ 3, 4문단에 따르면 부존자원 효과는 비합리적 심리 경향의 예시이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행동 경제학은 시스템 1과 2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모든 선택이 시스템 1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19. 정답 : ①

해설 : ⑤ '부존자원 효과'는 객관적 가치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합리적 자원 배분을 촉진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에서는 부존자원 효과로 인해 소유물의 가치를 실제 시장 가치보다 부풀려 평가하게 만들고, 이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거나 시장 거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① 손실 회피가 시스템 1의 감정적 반응과 관련되므로 타당하다. ② 소유라는 주관적 경험이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문 내용과 부합한다. ③ 시장 거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④ 전통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 가정에 대한 반례로서 심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타당하다.